

영광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직도입...농촌 인력난 해소

지자체 간 첫 MOU 올해 73명 투입
현지 면접·농가 맞춤형 배정 만족도 ↑
내년 항공료·기숙사 건립 지원 강화
郡 “단순 일손 넘어 지속 가능 자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직접 도입 등 인력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라오스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 73명을 농촌 현장에 투입해 인력난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안착시키고 있다.

그동안 군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왔다. 2022년 8명으로 시작



영광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라오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를 영농 현장에 투입한다. 사진은 지난 5월 임국한 계절근로자들이 기본교육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영광군 제공>

해 2024년 171명, 2025년 235명으로 도입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그러나 2023년부터 초청 대상이 2촌 이내 가족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는 농촌 현장의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외

지자체와 직접 MOU를 체결했다.

첫 직도입인 만큼 군은 선발 단계부터 실무진이 직접 라오스 현지를 찾아 면접을 진행하고 교육 시설을 점검했다. 단순히 인원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농가별로 요구하는 인력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1차로 39명의 MOU 계절근로자가 영광 땅을 밟았다. 현장 만족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고용주들의 추가 요청이 이어져 7월 34명이 2차로 합류했다. 오는 10월 말에는 딸기 재배 농가 등의 수요에 맞춰 19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 낯선 이국땅에서 의지할 곳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적응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농가들은 자발적으로 숙소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고 수시로 부식을 챙겨주는 등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의 숙련도 부족이나 무단 이탈(1명), 근무 태만 출국(2명) 등 시행착오도 발생했지만 군은 이를 계기로 밀착 관리를 통한 현장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최장 8개월간 머무는 계절근로자를 단순

한 한시적 노동력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촌의 인적 자산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경험을 쌓은 근로자가 내년에 숙련공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군은 내년부터 외국인 등록·마약 검사 비용, 지역 문화 체험, 항공료,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또한 지역농협과 연계한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전용 기숙사 건립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은 단기 처방이 아닌, 함께 일할 사람을 키우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며 “올해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내년 현장에 서 맺은 인연이 영광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범위 조정 절실

최대 300만원 이내 구입비 50% 지원
엔진 등 핵심부품 교체 보조금은 제외
전액 자부담...농가 새 기계 구입 선택
목포시 “부품비 추가 지원 방안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매년 추진 중인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 기계 구입만 지원하고 주요 부품 수리는 배제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자원 낭비와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총 168억3천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42억7천400만원이 다목적 소형 농기계 4천73대 보급에 투입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멀쩡한 본체를 두고 엔진 등 핵심 부품만 교체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농기계조차 수리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발농사에 주로 쓰이는 관리기의 경우 새 제품 가격은 약 230만원 선이다. 반면, 고장 난 엔진만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9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엔진 교체에는 보조금이 나오지 않아 농가가 9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기존 관리기를 폐기하고 새 제품을 사면 보조금 50%가 지원돼 농가 자부담은 115만원으로 줄어든다.

농가 입장에서는 25만원만 더 보태면 한 기계를 고치는 대신 새 기계를 살 수 있어 자원 재활용 대신 신규 구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다.

농업 현장에서는 당초 사업 취지인 농업인 부담 경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모든 수리비를 지원하는 대신, 기계 수명 연장

에 직결되는 엔진이나 변속기 등 핵심 부품 교체에 한해 신규 구입비의 일정 비율 이하로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된다.

목포 지역의 한 농민은 “중요 부품만 바꾸면 장기간 쓸 수 있는 멀쩡한 기계들이 수리비 부담 탓에 버려지고 있다”며 “부품 수리에도 구입 보조금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준다면 예산도 아끼고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 당국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애초 소형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다 보니 수리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엔진 등 핵심 부품비 추가 지원 방안을 전남광주특별시에 정식 건의하고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규정상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농가는 신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포=정해진 기자>



“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해남군, 감속운행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21일 “가을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기계 사고는 농로·경사지 등에서 전복·추락하거나 도로 운행 중 발생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의 경우 농기계 조작·운행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 운행 전 안전점검 ▲농로·경사지·급커브 등 위험 구간 감속

운행 ▲음주운전 금지 ▲야간 운행 시 등화·반사장치 확인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은 농기계 야간 운행 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고휘도 반사지 600조를 제작해 14개 읍·면에 배부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전 농기계 상태를 점검하고 농로나 도로에서는 충분히 감속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개호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 당직자들과 예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027년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민주당, 내년 국비 확보 ‘맞손’

농어촌 기본소득 등 13개 과제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21일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개호 국회의원, 이남호 함평군수, 모정환 시의원, 김영인 군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7년 국비 확보와 지역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총 13건의 국고 건의 사업을 설명하며 전폭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로7 대응 친환경 타이어 기술 고도화 ▲빛그린국가산단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확장 ▲함평 천지한우 육종센터 구축 ▲해양관광거점 연결

도로 개선 등이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함평의 핵심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돼 지역발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 필수 국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남호 함평군수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선 국외와 정치권의 꾸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당정이 긴밀히 소통해 산적한 현안을 하나씩 풀고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내년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영암군 ‘AI 스마트홈 돌봄’ 준비 박차

생활지원사 70여명 맞춤형 교육

내년까지 100가구 서비스 연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21일 “최근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70여명을 대상으로 AI 스마트홈 시범사업 필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복지 서비스인 ‘인공지능(AI) 스마트홈 돌봄’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방식과 디지털 돌봄 기기 기능 숙지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 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기기 사용법과 대상자 상태 확인 방법, 현장 활용 노하우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다.

AI 스마트홈 시범사업은 돌봄과 건강 관리가 시급한 노인·만성질환자 등 10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 12월까지 추진된다.

대상자 가정에는 AI 스피커와 화재·가스·활동량 감지기, 응급 호출기 등 안전관리 기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된다. 개인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려로봇, 스마트워치, 혈압·혈당계 등 맞춤형 기기도 추가 지급된다.

군은 스마트 기기가 대상자의 일상과 건강을 살피다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각 생활지원사 등 현장 돌봄 인력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다중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윤재광 영암군 부군수는 “돌봄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따뜻한 돌봄을 돕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기기가 보낸 구조 신호를 현장 인력이 신속히 파악해 꼭 필요한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진도군, 배추 정식기 용수 확보 총력

9월 강수량 3.2mm 평년比 107.9mm ↓

5억8천만원 투입 관정·웅덩이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가을배추 정식기를 맞아 발생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용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달 중순 지역 평균 누적 강수량은 32mm에 그쳤다. 이는 평년 대비 107.9mm나 적은 수치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배추 정식 후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가뭄이 길어질 경우 조기 생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가뭄 대책 예산 5억8천만원을 투입해 웅덩이 70곳을 설치하고 관정 40곳을 개발 중이다. 읍·면 잔여 사업비와 예비비도 추가 편성해 피해가 심각한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과에서도 지하수 개발을 위한 관정 지원에 나서는 등 다방면의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배추 정식 최성기에 강수량이 부족해 영농 피해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수장과 관정, 양수기 등 가용한 모든 장비와 행정력을 총동원해 농가의 시름을 덜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 기자

강진 옛 성화대 골프장, 복합체육공간 재탄생

40억원 투입 리모델링 사업 내년 착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방치됐던 옛 성화대대학교 골프장을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체육공간(조감도)으로 재탄생시킨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사업은 지상 4층 규모 기존 건물을 활용해 생활체육과 여가 기능을 결합한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로 국비 30억원을, 성화대 골프연습장 정비사업으로 도비 10억원을 확보하며 총 4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새롭게 꾸며질 복합공간의 1-2층에는 키즈카



페와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며, 3-4층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골프연습장으로 탈바꿈한다. 어린이부터 골프 동호인, 일반 주민까지 전 연령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강진=박필용 기자